

‘대권 도전’ 이재명, 주중 사퇴 공식화… 야권 경선 룰 ‘관건’

야권 대선후보 선출방식 주목

8~9일 당 대표직 사퇴 가능성 커져 민주당, 조기 대선 경선 룰 마련 중 비명계는 ‘국민투표’ 전면 요구도 조국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 까지’로 당헌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당은 특별당규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만들어 조기 대선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각 정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고할 경우 4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약 한달 가량의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7일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관측됐으나, 사퇴 시점을 8~9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두 번의 당 대표, 탄핵 정국에서 제1야당 대표로 야당을 이끌며 유력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최대 정치 위기를 넘겼다.

당의 패권을 장악한 이 대표가 야권

의 대권후보로 직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선 기간의 비명계 대권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이뤄내 이 대표에 대적할지도 관심사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는 반면, 지난 전 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2과전을 벌였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신삼김(新三金)’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곧 대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00% 온라인 국민투표로 야권의 통합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압도적 승리 해야 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당 내부의 절차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정말 많은 요구들을 분출시킨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일단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난 이후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수렴하고 야권이 단일화돼 이번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지난 1년 동안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해 각 1인1표를 주고 이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반면, 비명계는 일반 국민 100% 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oul.co.kr

국민의힘 대권주자 ‘우후죽순’… 당 안팎 경선 전운 고조

‘원톱’ 부재 속 내부 혼선 우려

홍준표·김문수 등 출마제비 공식화 오세훈·한동훈·안철수 등 저울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이 우후죽순 대권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의 충격 속에 주말을 보냈으나, 두 달 가량 남은 조기 대선 준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번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선 모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당 중진 간담회를 가지며 혼란스러운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재선임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반)민주당을 기치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장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비상대책위원실에서 열린 대선후보 선출 경선 일정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

로 보인다. 이 대표에 가장 잘 대적할 후보를 내세운 다음에 중도와 보수 이슈를 선점하며 유권자를 설득하면 여당 출신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승부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

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탄핵심판 막판 대권 행보를 자제했던 여권 잠룡들도 이번주 속속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라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시민단체가 개최한 ‘대선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파면 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는 데 집

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친한(친한동)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권은 무너졌고 정치는 흔들렸으며 경제는 암울하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국가의 리셋, 시대의 교체를 요구받고 있다”며 한 전 대표가 시대의 위기를 넘어설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범여권에서 일찍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구·경북(TK)을 찾으며 경북 철곡에 위치한 조부모 묘소에 참배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적할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다는 것도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자칫, ‘원톱’ 없이 경선이 치러져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면 당에도 좋을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태홍 기자

탄핵 정국에 ‘연금 로드맵’ 흔들… 특위연기·제도손질 ‘차질’

‘연금 개혁’ 항방은

복지부, 모수조정 후속작업 착수 정치권선 ‘신연금제도’ 논의 확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였던 ‘연금개혁’의 항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기 대선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약속했던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오후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관련법의 하위법령 개정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0일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43%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복무

시 국민연금 납부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개혁안이 탄핵 심판 전 여·야 합의 하에 공포된 만큼, 복지부의 하위법령 개정은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구조개혁’을 비롯해 개혁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약속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금특위는 지난 2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4일 탄핵 선고를 이유로 오는 8일로 회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많은 쟁점을 요구해 여·야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놓기 어렵다. 더군다나 여·야의 연금개혁 추진 목표에도 차이가 분명한 만큼 구조개혁을 비롯한 연금개혁의 남은 과제는 대선 이후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구조개혁 논의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전제로 한 ‘신연금제도’의 도입까지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직접적으로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개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도 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낮은 합계출산율(0.75명)에서도 미래세

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국민연금의 미적립 총당금은 재정을 투입해 정리하고, 미래의 국민연금 기금을 새롭게 적립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세대의 기대수익비(보험료로 낸 돈 대비 받게 되는 돈)가 1보다 크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세대의 수익비 최대치가 1보다 클 수 없다”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수개혁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